



# 우리나라 石油政策의 当面課題와 推進方向

朴 鳳 煥  
(動力資源部長官)

이 자료는 지난 1월 27일 朴鳳煥 動力資源부장관이 MBC-TV 對談에서 밝힌 올해 動力資源부의 政策중 석유부문을 발췌한 것이다. <編輯者註>

## 基本方向

지난 70년대의 세계경제는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거의 모든 나라가 「낮은 成長과 높은 인플레이」에 크게 시달려 왔다. 그 주요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때문이다.

80년대에도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문제는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또 석유문제는 앞으로 석유에 代替할 수 있는 경제성있는 에너지源이 발견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경제성장의 가장 큰 제약요인, 즉 「成長의 壁」이 될 것이다.

그 동안의 석유파동은 석유를 기초로 형성된 현대산업사회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으며, 2차대전 이후 자유세계의 경제질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브레튼·우즈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석유파동이 있을 때마다 國際流動性은 產油國으로 흘러 들어 극단적인 流動性 偏在現象을 일으켜 국제통화질서로서의 IMF체제를 변질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무역면에서도 범세계적으로 보호무역사조를 만연시켜 국제무역질서로서의 GATT체제를 붕괴시켜 자본주의 경제질서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難時代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와 같은 非產油開發途上國이다. 우리 나라는 에너지자원이 빈약하여 총 에너지수요의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석유의존도가 64%에 달하고 있어 당분간은 산유국의 끊임없는 가격인상과 減産위험을 피할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산유국의 끊임없는 가격인상과 감산위험으로부터 가급적 빨리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脫石油政策」에 두고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에 정책의 우선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석탄의 早期增産, 원자력발전의 적극 추진, 천연가스, 太陽熱, 潮力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代替에너지 가운데 석탄은 국내 채탄여건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고, 천연가스는 全量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太陽熱, 潮力등은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이들은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와 같이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代替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한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脫石油을 위한 원자력추진계획」은 91년에 석유의존도를 현재의 64%에서 42%로 크게 낮추고, 원자력발전은 현재의 6%에서 36%로 크게 높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당장에 필요한 석유의 수급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는 석유등 해외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안으로는 에너지의 소비절약과 이용의 합리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에너지정책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 石 油 確 保

석유는 73년의 제 1 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미 「단순한 商品」이 아니고, 산유국들이 국제정치외교상의 핵심무기로 활용하기 때문에 석유의 공급은 항상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석유값은 시장원리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카르텔결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석유값은 OPEC회의가 있을 때 마다 인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석유의 수급사정이 불안하고, 높은 가격체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석유를 기초로 형성된 현대산업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석유의 안정확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가 아닐수 없다. 정상적인 상황 아래에서는 「값싸고 質좋은 석유」의 확보가 과제가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石油難時代」에는 우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석유 한방을 나지 않고, 석유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있어서는 석유의 안정확보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 우리나라의 원유수요량은 2억 1천만 배럴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루에 58만 배럴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이미 우리나라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나라와는 기존의 친선관계를 바탕으로 석유외교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원유供給先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특정지역에 대한 과도한 석유의존에서 야기될수도 있는 원유공급의 불안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원유공급선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東南아시아, 中南美, 아프리카 등의 산유국들에 대해 건설진출 등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供給先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원유도입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유회사의 자체조달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민간종합상사의 광범한 기능을 활용해서 원유도입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 에 너 지 節 約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에너지절약과 이용의 합리화가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에너지절약만은 우리 국민들의 意志와 노력에 의해서 結實을 거둘수 있는 분야이므로 에너지절약은 곧 外貨의 절약이며 國력의 축적이란 관점에서 정부, 企業, 家計가 다 같이 손쉽고 효과가 큰 부문부터 차근 차근 실천에 옮겨 가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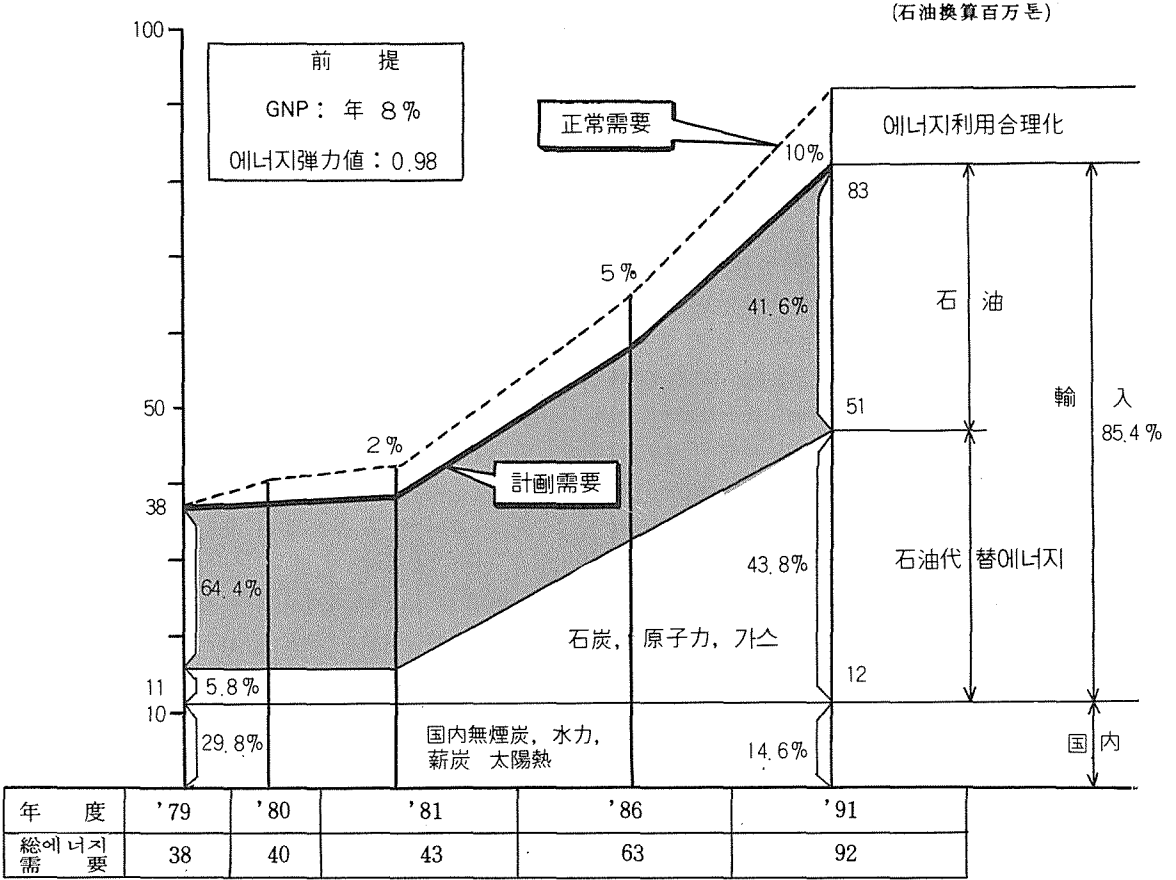
정부는 91년에 「정상적인 에너지수급의 10%」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차적인 계획으로 에너지절약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에 종합에너지절약시책을 수립하여 산업부문, 수송부문, 家計 및 상업부문등 각부문별로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세워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려는 부문은 산업분야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에너지소비중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로서 가장 높고, 또한 각산업별 에너지투입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日本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산업의 에너지투입비율은 電力 2배, 섬유 1.9배, 기계 1.7배이며 산업전체로 보아 1.4배에 이르고 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中長期的으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 산업구조 자체를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며, 우선은 老朽 보일러등 열발생시설과 열수송설비, 열사용설비를 改替해 나가야 하겠다.

그 동안 燃料多消費産業體 8백 6 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열손실율이 발생설비에서 18.4%, 수송설비에서 0.7%, 사용설비에서 2.4%로서 총열손실율은 21.5%에 이르고 있다.

● 長期에너지 需給展望



	'79	'91
○節約目標	2%	10%
○輸入依存度	70.2%	85.4%
○石油依存度	64.4%	41.6%

(原子力, 有煙炭, LNG 등으로 43.8% 代替時)

이처럼 우리나라 산업의 열손실율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을 위해 시설改替를 하는 경우에 그 효과는 대단히 클것으로 기대된다. 즉 이들 8백6개 기업의 시설改替가 이루어지면 석유의 절약은 기름으로 환산하여 연간 벵커-C 油 1천1백30만배럴, 금액으로 환산하여 연간 2천4백95억원에 이르러 국가전체로 보아 커다란 효과를 거둘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시설개체후 11개월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절약과 함께 景氣자극책의 하나로 老朽보일러를 포함한 에너지관련시설의 改替를 획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2천억원의 시설자금을 마련하고 수출금리수준으로 지

원중에 있으며, 시설을 하거나 개체를 하는 경우에는 내국세 및 관세지원의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 과거의 지원시책중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 부문의 에너지절약효과가 클뿐만 아니라 최근 침체된 투자활동에 活力素를 불어 넣음으로써 시설투자를 연쇄적으로 유발하여 우리 경제를 「不況의 늪」에서 조속히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油 價 政 策

국제원유가는 산유국들의 政情이 불안하여 가끔 생산 및 공급이 중단되기도 하고 OPEC 의

카르텔가격정책에 따라 석유값을 국제인플레이스에 연동시키려는 움직임이 고조되어 석유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석유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석유공급은 한정되어 있어 80년에는 자유세계 전체로 보아 60만배럴의 공급이 초과되고 있는 상황에서에서도 석유값은 일방적으로 오르기만 하였는데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유세계 전체적으로 하루에 3백30만배럴의 공급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급구조상으로도 석유값은 오르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非産油消費國으로서 이리 한 국제적인 석유값 인상을 피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며, 국제석유환경에 우리 스스로를 적응시켜 나가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석유를 사용하는 사람이 오른 값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油價인상요인을 특정경제주체만이 부담하는 경우에 이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 기업, 家計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석유가격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재정사정이 넉넉치 못해 세출예산상으로는 油價인상요인을 흡수할 여력이 없지만, 稅收상황을 보아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조정함으로써 정부가 해외인상요인을 1차적으로 완충시킬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업부문에 있어서는 우선 精油會社들이 값싼 기름의 도입과 近距離 원유를 많이 확보하여 수송코스트를 줄여 국내 석유값의 인상요인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모든 기업들은 油價인상으로 인한 원가상승요인을 자체내에서 최대한으로 흡수하여 각기업들이 생산하는 2차제품의 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협조해 주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의 능력으로도 흡수할 수 없는 국내 석유류가격 인상요인은 가격에 반영하여 기름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油價조정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국내 油價의 인상요인을 장기간 누적시켰다가 한꺼번에 인상하는 경우는 지난해 年初에 경험한 바와 같이, 국내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油價상승요인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그때 그때 조금씩 현실화해 나감으로써 무리없이 국제에너지환경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다만 越冬期 등 에너지 盛需期에는 가능한 한 가격조정을 피함으로써 국민생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석유는 우리가 살아 가는데 필요한 혈액과 같은 것이므로 이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왕왕 자신의 고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국가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사례도 과거에는 없지 않았다.

앞으로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하겠다.\*

